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및 적응 실태와 정책적 함의*

— 경상북도를 사례로 —

이 철 우**

Settlement and Adaptation Status of Urban to Rural Migrants and Policy Implications :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Lee, Chul Woo**

요약 :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귀촌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귀농·귀촌, 정착과 적응, 이주동기, 정책적 함의, 경상북도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settlement and adaptation status involved in differing urban-to-rural migration types in Gyeongbuk Province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ttributes of urban-to-rural migrants in Gyeongbuk Province differ spatio-temporally, and their status of settlement and adaptation i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urban-to-rural migration types. "U-turn" migrants who are mostly first-generation rural-to-urban migrants with experience in farming and rural community life engage primarily in crop agriculture. "J-turns" and "I-turns," who have no experience in farming or rural community life, migrated for idyllic rural life. The household income of these type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U-turn type. U-turns' degree of adaptation is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 types, and U-turn migrants mainly rely on family and community asse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J-turns' and I-turns' degree of satisfaction is relatively high. However they typically have substantial difficulties in adapting due to lack of pre-migration preparation. Policy implications are : 'switching away from general and inclusive policies of support,' 'transition to policies embedded in the attributes of regions and migration types,' 'improvement of policy governance,' 'enhancement of support for pre-migration preparation and customized support based on the needs of migrants,'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s of settlement environment to better integrate migrants with current residents.'

Key Words : urban-to-rural migration, settlement and adaptation, migration motivation, policy implications, Gyeongbuk Province

1. 머리말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선별적 이촌향도에 의한 젊은 층의 과도한 이농에 의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WTO체제의 출범과 FTA의 체결로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개방화로 지역 농업의 국내외적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

어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붕괴될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즉 '귀농·귀촌'¹⁾은 침체된 초고령화 농촌사회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최운지, 2013). 특히 귀농·귀촌이 단순히 기존 도시인의 대안적 경제활동으로의 의미 외에 베이비붐 세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지리학과 교수(Director of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Professor, 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wolee@knu.ac.kr)

의 본격화된 은퇴와 보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과 의미도 확대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의 귀농·귀촌은 새로운 형태의 삶의 시작이자, 새로운 사업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의 본원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동시에 농업도 종래 저부가가치산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회의 장이 되면서 목가적인 생활환경의 농촌지역사회는 도시인들의 인식처가 되고 있다(한재형, 2013). 실제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 귀농·귀촌가구는 약 16만 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4년간의 귀농·귀촌가구(114,521세대)는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농촌 및 농업 인구의 확보에 더욱더 기여할 전망이다(이철우·전지혜, 2015).

이와 같은 농촌사회에 인구이동의 사회적·경제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²⁾. 이러한 지원정책은 귀농인들의 정착에 있어서의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귀농관련 전문가 부족과 주체들 간 거버넌스 형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정섭, 2009). 이를 반영하듯 절대 다수의 귀농·귀촌인들은 나름대로 정착에 성공하고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사람들 역시 상당수이다(한재형, 2013, 171). 이러한 역귀농·귀촌에 대한 전국적 차원에서의 통계자료나 연구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귀농·귀촌지역의 하나인 전라남도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최근 5개년(2009년~2013년) 평균 역귀농 비율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2014년 11월 6일). 비록 역귀농을 하지 않은 귀농가구나 하더라도 귀농가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일반농가 57%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 소득이 일반농가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구는 농촌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귀농의 잠재성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귀농인들의 경우 다시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은 역귀농을 포함하여 이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 특히 이들의 정착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전국단위의 불특정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한편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의 증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해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도약기(이철우·전지혜, 2015)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도약기 이전에는 귀농·귀촌의 사전유치전략 차원에서의 귀농·귀촌의 실태(김재홍, 1998), 정착특성(우종현, 1997; 정한모, 2002), 지원방안(김형용, 1998)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귀농·귀촌의 사후관리전략 차원의 만족 및 적응 정도(강대구, 2006; 박공주, 2006; 이상호, 2008; 조영재·조은정, 2013; 김성학·서정원, 2014),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김정섭, 2009; 최윤지, 2013)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귀농·귀촌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사상(事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은 배제된 채 국민국가 단위의 단일 공간스케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철우·전지혜(2015)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은 지역성 자체가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집적하는 경향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귀농가구의 속성도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단순히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기존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제2의 삶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정착과 적응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와 정책은 귀농·귀촌인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영농 및 농촌공동체 경험을 반영하는 이주경로 등과 같은 유형별 특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왔다. 더욱이 앞으로의 귀농·귀촌정책은 전국 혹은 각 지자체 단위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귀

농·귀촌인들이 농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발전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귀농·귀촌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인(가구) 유형별 정착과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에 관한 일련의 연구의 하나로 귀농·귀촌의 지역적 특성(이철우·전지혜, 2015)에 이어서 귀농·귀촌의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경상북도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재배기술의 축적, 대도시와의 양호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등의 유리한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우리나라에서 귀농인의 비중이 가장 큰 귀농·귀촌선호대상지역이다(이철우·전지혜, 2015). 그리고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및 신문기사 자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그리고 경상북도의 귀농·귀촌관련 통계자료이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23일~9월 5일에 걸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외 심층면담조사는 2014년 6월 16일~18일에 걸쳐 상주시 귀농·귀촌특별지원팀과 귀농귀촌정보센터 관계자와 귀농인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영남일보에 2011년 4월 4일~2012년 3월 2일에 걸쳐 연재된 총 46명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귀농열전’의 기사내용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실태

경상북도의 귀농·귀촌의 정착 및 적응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인 귀농·귀촌인(가구)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 전제된다. 그러나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실태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전편에 해당하는 이철우·전지혜(2015) 논문의 내용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실태에 대해서 이철우·전지혜

(2015) 논문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1)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변화추이와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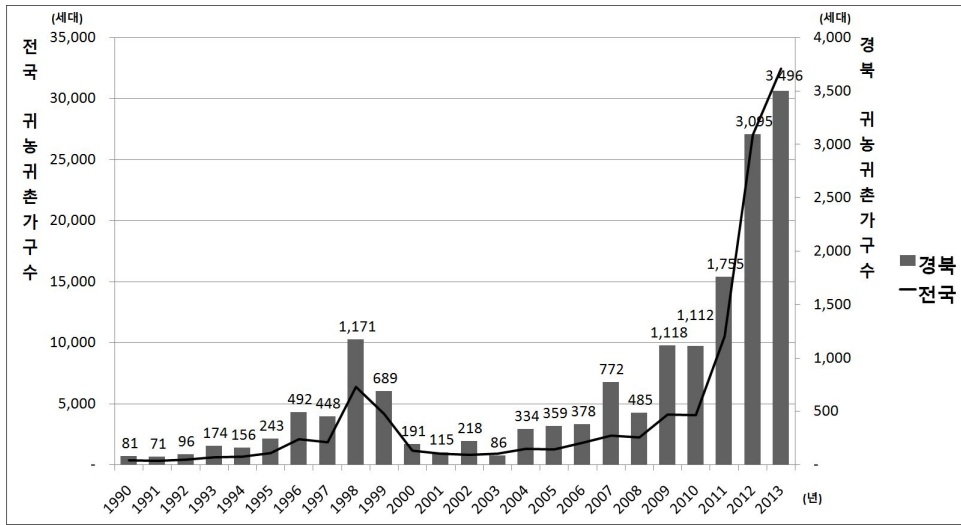
2013년 현재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 수는 17,135세대로 전국의 15.8%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17.8%이다.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귀농·귀촌의 추이는 전국 차원의 추세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즉 경상북도의 귀농·귀촌은 1998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점차 감소 혹은 정체기간 중에도 경상북도의 비중은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7년에는 타 지역에 앞서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우성호, 2014)³⁾.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시의 압출요인 외에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농촌의 흡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소득수준의 증대로 전원생활을 향유하려는 경향의 강화로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증가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013년 현재 경상북도의 귀농·귀촌가구(12,643세대)의 시군별 분포실태를 <그림 2>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귀농·귀촌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상주시로 1,682가구(13.3%)이고, 그 다음은 영주시(1,197가구, 9.5%), 봉화군(1,180가구, 9.3%)의 순이다. 이 중에서 상주시와 영주시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으며⁴⁾, 봉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농지 및 주택구입 등 귀농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남일보, 2014년 7월 16일). 그리고 이들 지역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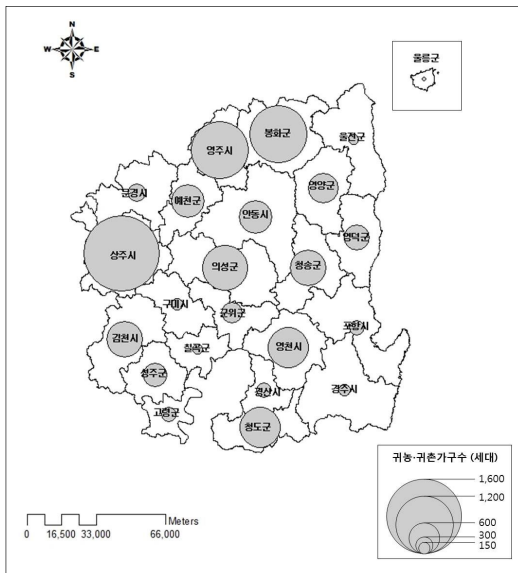
반면에 귀농·귀촌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포항시(280가구), 고령군(239가구), 경산시(237가구), 경주시(197가구), 구미시(192가구), 울진군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및 적응 실태와 정책적 함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자료, 1990~2012;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출처 : 이철우·전지혜, 2015

그림 1. 경상북도의 귀농·귀촌가구 수의 추이



자료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의 내부자료, 2003~2012;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출처 : 이철우·전지혜, 2015

그림 2.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의 시군별 분포

(155가구), 칠곡군(140가구) 그리고 울릉군(29가구)이다. 이 중에서 울릉군은 농업활동에 제약이 큰 도서지역이며, 울진군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아주 불리한 해안벽지지역이다. 이 외 지역들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공업 혹은 관광도시와 대구 광역시의 인접 시군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농경지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귀농 대상지역으로의 매력도가 낮은 지역들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 영덕군, 성주군, 의성군, 영양군 그리고 군위군이다. 이들 지역들은 특정과일이나 채소재배의 특화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김천시, 안동시, 예천군, 영덕군은 포도, 감, 사과, 복숭아 등의 대표적인 과수재배지역이고 성주군, 의성군, 영양군, 군위군 그리고 문경시는 참외, 마늘, 고추 등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채소재배 지역이다. 더욱이 최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과채류 특화지역들은 향후 귀농 대상지역으로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 귀농·귀촌은 전국 차원의 변화 추세와 동일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적 분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시군지역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자연 및 농업 환경, 대도시와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따라 그 비중의 차이가 확대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귀농·귀촌 가구의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귀농·귀촌가구의 속성도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의 속성

경상북도 귀농·귀촌 가구의 지역별 속성은 시군

단위가 아닌 4개 권역⁶⁾단위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귀농(70.3%)이 중심이며, 특히 북서과소지역권과 중부내륙권은 귀농의 비중이 각각 73.0%, 74.4%로 압도적으로 크다. 반면에 대구도시권(54.4%)과 동부해안권(65.4%)의 그 비중이 낮다. 이는 북서과소지역권과 중부내륙권은 다양한 품목의 특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대구도시권과 동부해안권은 대구시를 비롯한 인접한 광역시와의 양호

표 1. 경상북도 권역별 귀농·귀촌가구의 속성별 구성

(단위: 명, %)

속성	권역	북서과소지역권	중부내륙권	대구도시권	동부해안권	합계
연령	35세 미만	171 (5.6)	48 (2.7)	13 (1.6)	32 (7.3)	264 (4.3)
	35이상~50세미만	894 (29.1)	435 (24.7)	234 (28.3)	103 (23.4)	1,666 (27.3)
	50이상~65세미만	1,530 (49.8)	1,009 (57.2)	418 (50.6)	204 (46.4)	3,161 (51.8)
	65세 이상	475 (15.5)	272 (15.4)	161 (19.5)	101 (23.0)	1,009 (16.5)
	합계	3,070 (100.0)	1,764 (100.0)	826 (100.0)	440 (100.0)	6,100 (100.0)
가구 원 수	1인 가구	1051 (36.0)	515 (31.3)	199 (25.3)	176 (43.3)	1,892 (33.7)
	2인 가구	953 (32.6)	563 (34.2)	270 (34.3)	136 (33.5)	1,874 (33.4)
	3인 이상	918 (31.4)	569 (34.5)	318 (40.4)	94 (23.2)	1,842 (32.8)
	합계	2,922 (100.0)	1,647 (100.0)	787 (100.0)	406 (100.0)	5,608 (100.0)
이전 거주지	수도권	706 (51.1)	198 (24.6)	31 (9.2)	75 (31.8)	1,010 (36.6)
	중부권	110 (8.0)	43 (5.3)	6 (1.8)	17 (7.2)	176 (6.4)
	호남권	28 (2.0)	9 (1.1)	-	4 (1.7)	41 (1.5)
	대경권	362 (26.2)	436 (54.2)	242 (71.8)	84 (35.6)	1,124 (40.7)
	동남권	175 (12.7)	119 (14.8)	58 (17.2)	55 (23.3)	407 (14.7)
	기타	1 (0.1)	-	-	1 (0.4)	2 (0.1)
합계	1,382 (100.0)	805 (100.0)	337 (100.0)	236 (100.0)	2,760 (100.0)	
이전 직업 유형	자영업	898 (30.8)	464 (31.0)	208 (26.3)	104 (25.6)	1,674 (29.8)
	회사원	729 (25.0)	373 (24.9)	171 (21.6)	61 (15.0)	1,334 (23.8)
	노무자	363 (12.4)	297 (19.8)	132 (16.7)	71 (17.4)	863 (15.4)
	공무원	71 (2.4)	48 (3.2)	21 (2.7)	16 (3.9)	156 (2.8)
	주부	202 (6.9)	57 (3.8)	56 (7.1)	13 (3.2)	328 (5.8)
	기타	656 (22.5)	260 (17.3)	202 (25.6)	142 (34.9)	1,260 (22.4)
합계	2,919 (100.0)	1,499 (100.0)	790 (100.0)	407 (100.0)	5,615 (100.0)	
주 종사 분야	경중	1,223 (37.8)	493 (30.9)	168 (20.3)	202 (45.9)	2,086 (34.2)
	원예	96 (3.0)	159 (10.0)	148 (17.9)	9 (2.0)	412 (6.8)
	과수	939 (29.0)	556 (34.8)	113 (13.7)	55 (12.5)	1,663 (27.3)
	축산	82 (2.5)	93 (5.8)	22 (2.7)	11 (2.5)	208 (3.4)
	기타	898 (27.7)	295 (18.5)	375 (45.4)	163 (37.0)	1,731 (28.4)
합계	3,238 (100.0)	1,596 (100.0)	826 (100.0)	440 (100.0)	6,100 (100.0)	

자료: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의 내부자료: 연령(2008년, 2010~2012년), 이전 거주지(2010~2011년), 이전 직업 유형(2010~2012년), 가구원 수(2010~2012년)

출처: 이철우·전지혜, 2015

주: 1) 무응답 제외

2) 회사원은 사무직과 영업직을 포함하고, 노무자에는 생산직과 건설·건축직이 해당됨

한 접근성으로 상대적으로 귀촌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귀농·귀촌의 세대주의 연령⁷⁾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은퇴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장년층(27.3%), '65세 이상'의 노년층(16.5%) 그리고 '35세 미만'의 청년층(4.3%)의 순이다. 권역별로는 북서과소지역권은 50세 미만의 청년층 및 중장년층이 타 권역에 비해 다소 큰 비중(34.7%)을 차지하는 반면에 대구도시권과 중부내륙권은 50세 이상의 은퇴층 및 노년층의 귀농·귀촌 비중이 70% 이상에 달해 향후 두 지역은 농촌의 초고령화 경향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수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인 가구'의 비율(33.7%)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미혼인 청년층,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중장년층 혹은 배우자 없이 홀로 이주한 노년층에 의한 귀농·귀촌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는 북서과소지역권과 동부해안권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그 외 권역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귀농·귀촌하기 이전의 거주지⁸⁾는 대경권의 비율(40.7%)이 가장 높고 수도권(36.6%), 동남권(14.7%), 중부권(6.4%), 호남권(1.5%) 등의 순이다. 그런데 권역별로는 북서과소지역권은 수도권의 비율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북서과소지역권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결과로 이해된다. 반면에 중부내륙권은 대경권(54.2%)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도권(24.6%)이었다. 대구도시권은 대경권의 비율(71.8%)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대경권의 귀농·귀촌인들은 대구도시권에 혈연관계 혹은 지인들이 있거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던 곳과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⁹⁾. 마지막으로 동부해안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동남권으로부터 귀농·귀촌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귀농·귀촌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은 자영업의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고, 회사원(23.8%), 노무자(15.4%), 주부(5.8%), 공무원(2.8%) 등의 순이다. 권역에 상관없이 자영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북서과소지역권과 중부내륙권의 자영업,

회사원 그리고 노무자의 비율이 대구도시권과 동부해안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의 주 종사분야로는 경종(34.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과수(27.3%), 원예(17.9%), 축산(3.4%) 등의 순이다. 경종 및 과수 분야는 경상북도에서 축적된 영농기술과 기계화로 농사짓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실패 확률도 낮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북서과소지역권과 중부내륙권은 경종과 과수가, 대구도시권은 원예, 과수 그리고 축산 등의 상업적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동부해안권은 경종(45.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3.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정착과 적응 특성

귀농·귀촌의 정착 및 적응에 대한 정의와 그 범주는 연구자(김성수 등, 2004; 강대구, 2007; Fielding, 1974; 서규선·변재면, 2000)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¹⁰⁾.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적응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한다.

1) 귀농·귀촌의 유형구분과 비증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개념정의를 전제로 정착 및 적응의 내용적 범주를 귀농·귀촌의 동기 및 준비과정, 정착실태 그리고 적응과정상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였다. 귀농·귀촌의 정착과 적응은 귀농·귀촌인(가구)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속성을 지표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대구, 2006). 그런데 귀농·귀촌의 유형은 정착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¹¹⁾. 이 중에서 이주경로는 귀농·귀촌의 정착과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농능력 및 농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규범(norm) 등을 반영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경로를 기준으로 귀농·귀촌의 유형을 U턴, J턴 그리고 I턴으로 구분하였다¹²⁾. U턴은 경상북도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도시로 이주하기 이전의 동일 시·군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유형이며, J턴은 도시로 이주

하기 이전지역과는 상이한 경상북도 시·군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유형이다. 한편 I턴은 도시에서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유형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대상자(374명)의 유형별 비중은 I턴이 69.5%(260명)를 차지하는 반면에 U턴(22.7%)과 J턴(7.8%)은 각각 I턴 비율의 1/3과 1/8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귀촌의 증가 폭이 꾸준한 경향성을 유지하는 ‘도약기(2009년 이후)’ 이전에는 U턴이 주류를 형성하였다는 연구결과(정한모, 2002; 강대구, 2006)와는 크게 대조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U턴형의 이주자들은 직·간접적인 영농경험이 있고, 정착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촌향도’ 1세대이기 때문에 정착과 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반면에 I턴의 경우에는 ‘이촌향도’의 1.5세대¹³⁾이거나 2세대로 정착과 적응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2010년 이전과 이후의 귀농·귀촌인들은 그 속성과 적응에 있어서 상이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2) 귀농·귀촌의 동기 및 준비과정

귀농·귀촌은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과 동기 혹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착지역, 재배작물, 주택 및 농지 마련 등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한재형, 2013). 이런 점에서 귀농·귀촌의 정착과 적응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주제로는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들 수 있다.

먼저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동기를 제시한 <표 2>에 기초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동기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원생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영농’(37.6%), 그리고 실업 등의 이유로

도시에서의 생활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한 ‘탈 도시’(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동기에 있어서는 ‘영농’과 ‘전원생활’의 순위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강대구, 2006; 김철규 등, 2011). 그러나 대체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퇴직 시기 이전의 귀농·귀촌인이 주된 대상인 ‘도약기’ 이전의 연구에서는 영농을 비롯한 ‘경제적 이유’의 비중이 큰 반면에 그 이후에는 ‘전원생활 향유’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경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의 동기를 유형별로 보면, 첫째, ‘영농’의 경우에는 U턴의 비율이 4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I턴(37.3%), J턴(29.6%)의 순이다. 그리고 ‘전원생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J턴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U턴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탈도시’의 경우는 각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농’보다는 ‘전원생활’을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귀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U턴의 경우에는 ‘영농’이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 흰돌 체험마을에서 과수농장을 경영하는 박○○씨(54)를 들 수 있다. 박씨는 1979년 삼성전자의 산업체 위탁생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고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여파로 20여 년간의 직장을 퇴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퇴직 후 창업한 휴대전화 부품회사와 또 다른 사업의 실패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부인의 권유로 2008년 영농을 목적으로 고향으로 귀촌하였다. 농촌에서 성장하였고 고향으로 귀농한 탓에 안일한 생각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첫째는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수농사를 지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에 이듬해부터는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원 조성법을 비롯한 영농기술을 배웠다. 이를 통해 기존 농법과 신기술 농법의 큰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경북생물자원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슈퍼약도라지 재배로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성공한 농업경영자로서, 그리고 ‘농업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농목적의 U턴의 경우 단일하게 영농기술을 비롯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영농기술과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둘째, ‘전원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우는 오히려 영농과 농촌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기대하기 쉬운 I턴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J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농촌생활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과거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로 귀촌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귀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퇴직 후 쾌적한 삶의 추구’ 및 ‘농촌에서의 자신과 가족의 건강회복’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농촌에 정착해서 성공적인 영농을 통하여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의 박○○씨(58)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에서 17년간의 택시운전을 그만 두고, 평소 꿈꾸어 왔던 전원생활을 위해서 귀촌하였다. 첫해에 구입한 약 10,000m²의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전원생활을 꿈꾸었던 부부는 생계수단으로 직접 재배한 사과를 팔겠다는 생각에서 사과농사를 시작하였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사과대학에 4년간 다니면서 기술을 익히고, 지역의 사과재배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영농경험을 축적하였다. 그 결과 직접 밭효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도 익혔다. 지난해부터 친환경사과를 수확하

기 시작했고, 7천여만원의 소득도 올렸다. 박○○씨는 웬만한 농사 및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살림살이¹⁴⁾ 덕분에 두 번째 신혼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여유가 넘쳐 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8명의 친환경사과 재배자로 구성된 ‘한우리사과작목반’의 회장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도시’의 경우는 유형별 비율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I턴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거주 경험과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들은 도시에서의 실업 및 사업실패와 도시생활에 대한 싫증에 따른 도시생활의 탈출 대안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에 정착한 임○○씨(52)는 충북 충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떨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귀농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임○○씨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것은 도시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마찰이 견디기 어려웠던 임씨의 여린 성격 때문이다. 마땅한 곳을 찾던 임씨 부부는 경매에 나온 땅을 살펴보기 위해 과곡리를 찾았으며, 대 여섯 차례의 방문 끝에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재학 중인 세 자녀는 충주의 할아버지 댁에 두고 현재는 부부만 이주하였다. 이주를 위해 약 8,000m²의 경지를 임대하여 채리와 조롱박 등의 농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3년간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임○○씨는 1주일에 2회씩 문경 시내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충하였다. 농사경험이 없는 임○○씨 부부는 문경지역 여성귀농인 3명과 공동으로 전국의 축제장이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조롱박을 홍보하면서 판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만

표 2.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이주동기

(단위: 명, %)

유형 \ 동기	영농	전원생활	탈도시	기타	전체
U턴	50(42.0)	53(44.5)	15(12.6)	1(0.8)	119(100.0)
J턴	16(29.6)	30(55.6)	6(11.1)	2(3.7)	54(100.0)
I턴	132(37.3)	167(47.2)	44(12.4)	11(3.1)	354(100.0)
계	198(37.6)	250(47.4)	65(12.3)	14(2.7)	527(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주: ‘영농’에는 ‘농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가업인 영농 승계’, ‘농업의 전망이 밝아서’ 등이, ‘전원생활’에는 ‘퇴직 후 쾌적한 삶의 추구’, ‘농촌에서의 자신과 가족의 건강회복’,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전원생활을 원하기 때문’ 등 그리고 ‘탈 도시’에는 ‘도시에서의 실업 및 사업실패’와 ‘도시생활에 싫증이 나서’ 등이 포함됨.

들어 문경지역 귀농인들 간의 소통에 기여하는 동시에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도 하면서 현재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도시에 서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의 새로운 생계수단의 대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특히 영농 및 농촌공동체에서의 경험과 같은 귀농·귀촌인의 속성별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영농 및 농촌공동체의 성격이 과거와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영농 및 농촌생활의 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주할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그리고 영농기술의 습득 등 철저한 사전준비¹⁵⁾가 요구된다.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의 경우,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3.4%를 차지하여 대체로 2~3년 정도라는 조동석(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귀농·귀촌 후 정착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농기술 부족에 따른 영농활동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심층면담조사¹⁶⁾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귀농·귀촌의 사전준비 기간을 유형별로 보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I턴의 비율(29.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U턴(26.8%)과 J턴(21.4%)의 순이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을 포함한 ‘1년 미만’인 경우는 J턴(60.7%)과 I턴(54.1%)의 비율이 U턴의

비율(4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U턴(28.0%)의 비율이 I턴(18.0%)과 J턴(17.9%)과 10% 이상 높았다. 이는 영농 경험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I턴과 J턴은 U턴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상반된 설문조사에 대하여 심층면담조사¹⁷⁾를 실시한 결과, 특히 도약기 이전의 I턴과 J턴의 경우 영농과 농촌공동체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한 채,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춘 마스크미나 지자체의 홍보자료에 의존하여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U턴은 영농 및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의 권○○씨(57)는 2007년에 대학의 교직원생활을 퇴직하고 고향으로 귀농하였다. 평소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 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귀농을 결심한 것은 2002년으로, 그 후 귀농을 실행하기 전까지 약 5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한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과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는 I턴과 J턴을 비롯한 대부분의 귀농·귀촌인(가구)들은 각종 마스크미와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귀농·귀촌의 길에 오르는 경향성이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귀농·귀촌의 실패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었지만,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

표 3.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준비기간

(단위: 명, %)

유형 \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계
U턴	22(26.8)	18(22.0)	19(23.2)	23(28.0)	82(100.0)
J턴	6(21.4)	11(39.3)	6(21.4)	5(17.9)	28(100.0)
I턴	75(29.4)	63(24.7)	71(27.8)	46(18.0)	255(100.0)
계	103(28.2)	92(25.2)	96(26.3)	74(20.3)	365(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보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가구)들은 사전준비 과정에서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가 오히려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귀농·귀촌 이후의 정착실태

본 절에서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경우에는 귀농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정착실태를 업종과 연매출액이라는 영농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대상 귀농·귀촌 세대주의 약 85%가 농림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¹⁹⁾.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세대의 주요 업종을 보면, ‘과수’의 비율이 4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원예·채소’(21.7%), ‘경종’(19.6%), ‘기타’(6.0%), ‘축산’(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전국 귀농·귀촌가구의 경우는 ‘채소’의 비율이 4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과수’(33.8%), ‘특용작물’(28.5%), ‘논벼’(22.6%)의 순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경상북도가 전통적으로 사과, 감, 포도, 복숭아, 배 등의 과수의 생산량이 많고 그 종류도 가장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유형별로 세분하여 보면, ‘경종’의 경우에는 U턴의 비율이 2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I턴(19.1%), J턴(14.8%)의 순이다. 그리고 ‘원예·채소’도 경종과 마찬가지로 U턴(23.8%), I턴(21.8%) 그리고 J턴(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

수’는 I턴과 J턴의 비율이 각각 49.3%와 48.1%로 높은 반면에 U턴의 비율(41.3%)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축산’의 경우에는 U턴과 J턴의 비율이 각각 7% 대이며 I턴의 비율(4.4%)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종’의 U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경험한 업종은 경종이 중심이었고 이들 부모의 업종도 경종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I턴과 J턴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영농기술을 익혀야하기 때문에 최근 수익성이 높은 과수나 채소 및 원예 등의 업종에 종사하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착초기에는 경종에 종사하였으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큰 과수나 채소 등으로의 업종전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진군 기성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U턴형의 안○○씨(54)는 귀농 초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50,000m²의 논농사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규모의 벼농사로 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과채류 시설재배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딸기와 풋고추 등의 시설재배를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경상북도의 경우 ‘과수’에 있어서 I턴과 J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과수재배 지역과 과수의 종류 또한 많은 지역적 특성과 과수재배는 자금회전이나 수익성이 좋은 업종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경상북도 귀농·귀촌가구의 연매출을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전체의 37.3%로 그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1,000만원~3,000만원 미만’(31.8%), ‘3,000만원~5,000만원’(19.2%), ‘5,000만원~1억원 미만’(9.6%), ‘1억

표 4. 경상북도 귀농·귀촌세대의 유형별 영농업종

(단위: 명, %)

면적 \ 업종	경종	원예·채소	과수	축산	기타	계
U턴	18(22.5)	19(23.8)	33(41.3)	6(7.5)	4(5.0)	80(100.0)
J턴	4(14.8)	4(14.8)	13(48.1)	2(7.4)	4(14.8)	27(100.0)
I턴	43(19.1)	49(21.8)	111(49.3)	10(4.4)	12(5.3)	225(100.0)
계	65(19.6)	72(21.7)	157(47.3)	18(5.4)	20(6.0)	332(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원 이상'(2.0%)의 순이다²⁰⁾. 이러한 결과를 경상북도의 평균농가소득(2013년, 3,489만원)과 비교하면, 귀농·귀촌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의 매출액 가구의 비중이 큰 것은 그 이유는 농업은 대체로 3~4년이 지나야 본격적인 소득창출(오수호, 2012)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자의 대다수(64.9%)가 아직까지 제대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의 귀농·귀촌인들의 경우에는 '영농'보다는 '전원생활'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중이 점차 커진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업종과 연매출액의 관계를 보면,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축산'이며, 그 다음은 '경종'(14.3%), '원예·채소'(13.9%) 그리고 '과수'(8.2%) 등의 순으로 업종별 비중과는 역관계이다. 그리고 유형별 연매출액에 있어서는, 연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J턴(40.7%)과 I턴(40.3%)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상대적으로 U턴의 비중(27.5%)은 낮았다. 그리고 연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J턴과 I턴은 70% 이상이었고 U턴의 비율은 61.3%로 역시 낮았다. 반면에 연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U턴의 비율이 1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J턴(7.4%)과 I턴(11.8%)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J턴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I턴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는 U턴이 J턴과 I턴에 비해 매출액이 많지만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J턴과 I턴의 비율이 U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의 영농기술과 경험부족 그리고 전원생활의 향유라는 비경제적 목적으로 귀촌한 비율이 높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새로운 재

배 및 마케팅 등을 포함한 영농기술을 학습함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젊은 층의 I턴과 J턴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오히려 U턴보다 고소득자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서울 토박이로 제약회사 식품사업본부장이었던 변 ○○씨(56)는 2010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로 이주하였다. 그 식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건강식품의 시장 확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약회사에 근무 당시 알게 된 인연으로 청도의 작은 한 식품공장과 산수유 농장을 인수하고 귀촌하였다. 특허출원한 가공법으로 30여종의 자연건강식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오픈 마켓'보다는 대기업의 홈쇼핑을 통한 판로를 확보하여 현재 1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청도지역의 특산물인 청도반시를 원료로 한 다이어트 식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을 준비 중이다.

4) 적응과정상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본 절에서는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이 직업과 주거의 전환이라는 생소한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제와 그 해결방법 그리고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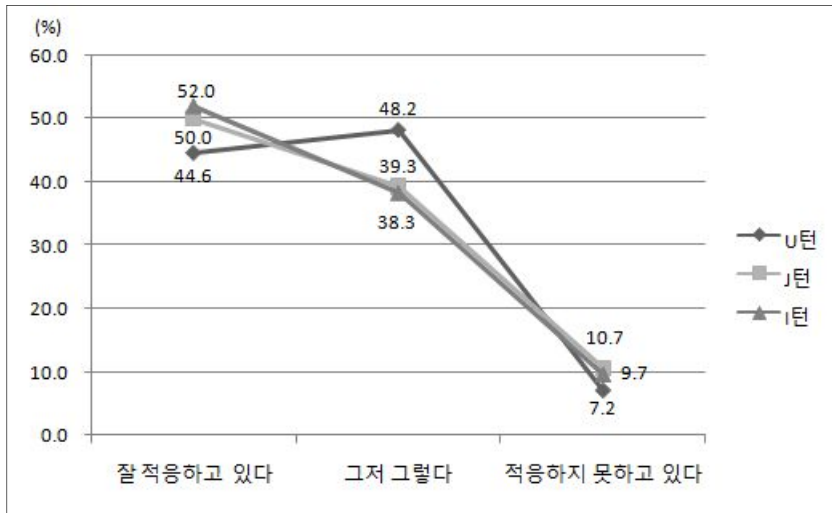
먼저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과정상의 적응에 대한 인식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359가구)의 절반이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구는 10% 이하로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잘

표 5.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연매출

(단위: 명, %)

연매출 유형	1,000만원 미만	1,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U턴	22(27.5)	27(33.8)	21(26.3)	9(11.3)	1(1.3)	80(100.0)
J턴	11(40.7)	10(37.0)	4(14.8)	1(3.7)	1(3.7)	27(100.0)
I턴	95(40.3)	72(30.5)	41(17.4)	23(9.7)	5(2.1)	236(100.0)
계	128(37.3)	109(31.8)	66(19.2)	33(9.6)	7(2.0)	343(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무응답 제외)

그림 3.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적응도

적응하고 있다'의 경우는 I턴의 비율(52.0%)이 가장 높고 U턴(44.6%)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는 J턴(10.7%)의 비율이 가장 높고 U턴의 비율(7.2%)로 가장 낮아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을 경험한 U턴의 귀농·귀촌인들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I턴과 J턴의 경우는 그 동기가 영농에 비해 전원생활 자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영농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에 U턴의 경우에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신의 영농기술과 변화된 생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이 정착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즉 과제는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작목 선택', '기반시설 부족', '농기계 구입 및 수리', '기술조연자 확보' 등을 포함하는 '영농기술'의 과제가 44.6%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영농자금 및 소득'(38.3%)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과다한 노동'(7.7%), '가족 문제'(5.0%), '이웃관계'(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농기술문제가 정착 및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최근의 귀농·귀촌인들의 대부분은

영농경험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영농기술과 최근의 영농기술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농기술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U턴(46.2%)이 I턴(44.7%)과 J턴(39.3%) 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농자금 및 소득' 등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J턴의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I턴(38.1%)과 U턴(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노동'의 경우에는 U턴(9.0%)의 비율이 가장 높고, J턴의 비율(3.6%)이 가장 낮았다. '가족문제'는 U턴(6.4%), I턴(4.7%) 그리고 J턴(3.6%)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I턴이 4.7%로 가장 높고, U턴과 J턴은 3%대로 비슷하였다. 결과적으로 '영농기술 관련 문제'와 '가족문제'를 제외하고는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U턴이 '영농기술 관련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단순히 '영농기술 관련 문제' 자체 외에 동기나 목적 그리고 기대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문제에 있어서는 U턴의 경우 귀농·귀촌을 도시에서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과 고향의 일가친척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I턴과 J턴에 비해 제약이 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가구)이 정착과정에서 직면

표 6.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정착에 있어서의 문제

(단위: 명, %)

항목 유형	영농자금 및 소득 등의 경제적 문제	영농기술 관련 문제	가족 문제	이웃관계	과다한 노동	계
U턴	27 (34.6)	36 (46.2)	5 (6.4)	3 (3.8)	7 (9.0)	78 (100.0)
J턴	14 (50.0)	11 (39.3)	1 (3.6)	1 (3.6)	1 (3.6)	28 (100.0)
I턴	98 (38.1)	115 (44.7)	12 (4.7)	12 (4.7)	20 (7.8)	257 (100.0)
계	139 (38.3)	162 (44.6)	18 (5.0)	16 (4.4)	28 (7.7)	36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무응답 제외)

주: '영농자금 및 소득'에는 '영농자금 조달', '농지 혹은 가족 구입',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낮은 소득', '생산물 판로' 등이, '영농기술관련 문제'에는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작목 선택', '기반시설 부족', '농기계 구입 및 수리', '기술조연자 확보' 등 그리고 '가족문제'에는 '자녀교육'과 '가족의 이해심 부족' 등이 포함됨.

하게 되는 과제들은 주로 '이웃 혹은 작목반의 도움'(34.7%)을 받거나 '기술센터 등 전문 지도사와 상담'(30.1%)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표 7), U턴의 경우에는 '이웃 혹은 작목반의 도움'과 '기술센터 등 전문 지도사와 상담'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J턴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인 개인 혹은 단체'의 비율(21.9%)이 U턴 비율의 3배 정도로 높았다. 그리고 '관련 서적 혹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I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귀농·귀촌의 정착 및 적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농촌공동체 구성원과 영농관련 전문기관이라고 하겠다. 특히 농촌공동체 일원인 이웃은 생활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농기술관련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핵심 주체라는 것은 심층면담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²¹⁾. 이와 같이 같은 마을의 이웃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식적인 기술교육기관을 통해서는 습득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tactic knowledge)을 동시에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착과정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웃·작목반'과 '귀농·귀촌인 개인·단체' 등 개별 귀농·귀촌인(가구)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은 실제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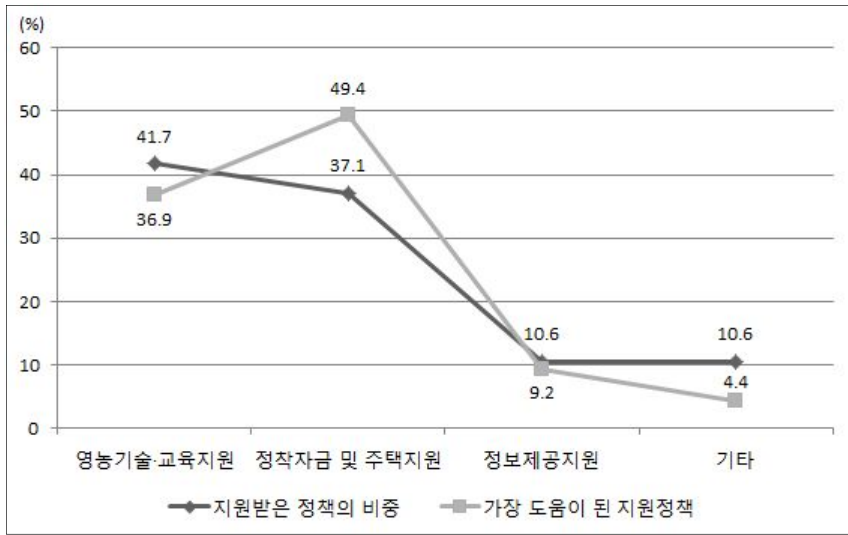
분석대상자의 약 56%가 정책적 지원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J턴(62.1%)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I턴(57.0%)이고 U턴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는 I턴과 J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U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표 7.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유형별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해결방법

(단위: 명, %)

방법 유형	전문지도사 상담	이웃·작목반과 상의	귀농·귀촌인 개인·단체의 도움	관련서적 또는 인터넷	기타	계
U턴	34(33.7)	37(36.6)	7(6.9)	20(19.8)	3(3.0)	101(100.0)
J턴	10(31.3)	9(28.1)	7(21.9)	6(18.8)	-	32(100.0)
I턴	86(28.8)	104(34.8)	39(13.0)	61(20.4)	9(3.0)	299(100.0)
계	130(30.1)	150(34.7)	53(12.3)	87(20.1)	12(2.8)	432(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

주: '지원받은 정책의 비중'의 기타에는 농기계관리비, 귀농인턴, 이주축하금 등이 포함됨.

그림 4.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지원 정책의 특성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기술 및 교육 지원’의 비율(41.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착자금 및 주택지원’(37.1%), ‘정보제공지원’(10.6%)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이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약 80%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점과 실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도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²²⁾. 그리고 ‘정착자금 및 주택지원’은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형태의 신규 귀농인 대상 지원으로, 각 지자체별로 영농창업지원금(상주시), 정착지원금(영주시), 빈집수리비보조(봉화군·상주시·영주시), 이사비보조비(봉화군)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한편 정보제공지원은 주로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은퇴계층의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귀농·귀촌 관련 정보는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수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받은 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착자금 및 주택지원’(49.4%)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이었다. 다음은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36.9%), ‘정보제공지원’(9.2%)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수요와 혜택기회 측면에서 지원정책의 중심이 되

고 있는 ‘영농기술 및 교육지원’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일부 귀농교육기관의 지원이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심층면담조사²³⁾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농자금’과 ‘농지 혹은 가축 구입자금’의 지원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만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귀촌인(가구)의 이주경로에 따른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경상북도 귀농·귀촌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공간적으로는 도내 전 시군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연 및 농업 환경, 대도시와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에 따라 지역별로 그 비중과 성격의 차별성이 확대되는 ‘분산화된 집적’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서과소지

역권은 수도권과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접근성,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지대 그리고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다양한 지역 특산물 등의 요인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귀농·귀촌 대상지역이다. 중부내륙권은 은퇴층 및 노년층의 귀농·귀촌이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고, 대구도시권도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쾌적한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점이 귀농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동부해안권은 산업구조 및 불리한 접근성 등으로 타 권역에 비해 귀농·귀촌 대상지로서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역별 귀농·귀촌인(가구)의 속성도 뚜렷하게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둘째, 경상북도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실태에 있어서는, 도약기 이전에 귀농·귀촌의 주류를 형성하던 U턴의 경우는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촌향도’ 1세대가 중심이며, 주로 영농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정착계획에 기반하여 귀농·귀촌한 비중이 큰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정착초기에는 가업을 승계한 경중에 종사하지만 그 후 적응과정에서 수익성이 큰 과채재배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나 소득수준은 대체로 중간정도이다. 그리고 I턴은 경상북도 전체 귀농·귀촌인(가구)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유형으로 영농 및 농촌공동체 생활의 경험이 전무한 세대로,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이 종사하는 주된 업종은 수익성이 큰 과채재배이다. 그러나 영농업종, 소득 등 경제적 실태에 있어서 U턴 및 J턴에 비해 양과 질적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이다. 예를 들면,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짧은 비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등으로 최고득층으로 자리 잡은 비율 또한 가장 높은 유형이기도 하다. J턴은 그 비중이 가장 유형으로, ‘이촌향도’ 1세대 혹은 1.5세대가 주류로 이주 동기는 과거 농촌전원생활에 대한 향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안정적인 전원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영농활동도 목가적 성격이 강한 과수와 특용작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가

장 높은 특성을 가진다.

셋째, 귀농·귀촌인(가구)의 적응에 있어서는 U턴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의 동기 및 기대치와 최신의 영농기술과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과의 간극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도가 낮았다. 그리고 적응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정책적 지원보다는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한편 I턴과 J턴은 전원생활에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영농 및 농촌공동체생활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한 결과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공식적인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은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탈도시인들의 대안적 생계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가구)은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영농 및 생활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개별 귀농·귀촌인(가구)의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치에 초점을 둔 단기적인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유형별로 상이한 속성의 정책 대상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정착과 적응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은 지원 주체와 범주나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금액 등에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 간의 부조화(mis-match)로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귀농·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다중스케일(multi-scales)’적이고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등 단계적인 정책에서 지역공동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귀촌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거버넌스 체계가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귀농·귀촌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이 정책 전문가로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서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수혜대상자인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대표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귀농·귀촌정책을 둘러싼 주체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은 역귀농·귀촌 혹은 재귀농·귀촌의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귀농·귀촌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 기간과 내용면에서 귀농·귀촌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하기 때문에 이주 초기에 영농 및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기존의 이주 후 지원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영농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실행적 학습(learning by doing)을 할 수 있는 농산업 인턴제도와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영농-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귀농·귀촌인의 유형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속성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다양화 및 질적 심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초고령화 농촌사회의 활력소 내지 신규 농업경영자로서 기대되는 젊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형 정책사업의 다양화 및 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계농 육성 정책 프로그램’과 프랑스의 ‘젊은 농업경영인 직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귀농·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정책 수단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안적 정책을 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과소화·공동화되는 농촌공동체 정주기반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정책과 기존의 정주기반개선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귀농과 귀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강대구, 2006; 고성준, 2007)와 귀촌을 귀농에 포함시키는 경우(유정규, 1998) 그리고 반대로 귀농을 귀촌에 포함(이시자, 2010; 박기서·정일훈, 2012)하는 경우로 구분된다(우성호, 2014). 그리고 귀농·귀촌관련 통계와 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인이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이며,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자로,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의 정의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을 정의하였다.
- 2) 중앙정부는 2009년 기존의 귀농·귀촌정책들을 정비한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다.
- 3) 대표적으로 2007년 초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영농교육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귀농인을 비롯한 농업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4) 최근 4년간(2010년~2014년) 상주시로 전입한 귀농·귀촌가구를 대상(859가구)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주시로 이주한 귀농·귀촌가구의 이전거주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대구일보, 2015년 1월 5일).
- 5)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후 귀농희망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은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은 대체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선호(우성호, 2014)하고, 특히 짧은 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수 및 채소가 있는 작목이다. 구체적으로 상주시(감, 포도, 한우, 오이)와 영주시(사과, 인삼, 한우)에서는 과수 및 시설작물부터 축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의 특산물이 생산되어 왔다. 그리고 봉화군은 메밀, 옥수수, 콩 등의 주요 잡곡 재배지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사과와 송이 등을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귀농인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석태문·이현지, 2010).
- 6) 권역은 시군별 귀농·귀촌가구수와 농업환경 및 특성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북서과소지역권, 중부내륙권, 대구도시권 그리고 동부해안권'으로 구분하였다. 각 권역별 시군 및 지역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북서과소지역권은 상주시와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그리고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개발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하고 청정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유리하다. 중부내륙권은 안동시, 김천시, 구미시와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을 포함하며 예로부터 농업이 주산업이었지만, 일부 지역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지방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비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대구도시권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를 비롯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동부해안권은 동해안에 면하고 있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그리고 울릉군이 해당된다. 이중에서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관광업이 주된 산업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 7) 귀농·귀촌인의 연령은 2013년의 귀농·귀촌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① 35세 미만(1992년~1979년생)의 '청년층', ② 35세 이상 50세 미만(1978년~1964년생)의 포스트붐(post-boomer) 세대 혹은 '중장년층', ③ 50세 이상 65세 미만(1963년~1949년생)의 베이비붐(baby boomer) 세대를 포함한 '은퇴층' 그리고 ④ 65세 이상(1948년생-)의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박시현, 2014).
- 8) 귀농·귀촌가구의 농촌 전입 이전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기타(해외)로 구분하였다.
- 9)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지의 선정에 있어서 혈연 및 지연관계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영농 승계적·가업 계승적 성격과 같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유정규, 1998).
- 10) 귀농·귀촌의 정착과정을 김성수 등(2004, 55)은 "도시인 등으로서 농업의 특성을 알고 검토·분석·탐색 후, 계속적인 관심 속에서 영농정착을 위하여 준비하고, 토지·자본 등을 투자, 영농에 정착하여 자립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강대구(2007, 66)는 "귀농자들이 농촌에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과정으로서, 귀농을 결정하여 실행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 11) 귀농·귀촌의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주로 이용되는 귀농·귀촌인(가구)의 속성으로는 이주경로, 이주동기 그리고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영농규모, 생활권 등의 정착형태이다. 예를 들면, 우중현(1997), 박영일(1998), 정한모(2002)등은 이주경로를 기준으로 U턴, J턴 그리고 I턴으로, 손상락(2012)은 이주목적 기준으론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그리고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유학열(2011)은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영농규모, 생활권 등을 종합하여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향형 그리고 도시출퇴근형으로 구분하였다.

- 12) U턴형은 직·간접적인 영농 및 정착지에서 생활한 귀농·귀촌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업기술 습득 능력과 정착지역의 사정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주지 자산을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착비용이 낮아 적용에 유리하다(정한모, 2002). J턴은 농촌출신이지만 고향이 아닌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한 유형으로, 대체로 고향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 농지가 없는 경우 혹은 자녀문제로 현재 거주지에서 원거리의 고향으로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고향과는 상관없이 귀촌하는 경우이다(박공주, 2006). 따라서 영농 및 농촌에서의 거주경험은 있으나 정착지에는 전혀 연구가 없기 때문에 U턴에 비해서 정착과정에는 농촌에서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턴은 다양한 도시생활의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박공주, 2006). 그러나 농촌거주 경험과 영농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우중현, 1997). 또한 농촌지역민과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기술교육 외에 농촌공동체생활의 규범을 포함한 다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 13) 본 연구에서는 '이촌향도' 1.5세대를 농촌에서 성장하여 도시로 이주한 1세대와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에서 생활한 귀농·귀촌인으로 규정하였다.
- 14) 귀농 전에는 21평(69m²) 크기의 아파트에 다섯 식구가 함께 살았으나 현재는 35평(115m²)의 살림집에 창고와 저온저장고까지 합치면 114평(376m²)의 주택에 살고 있다.
- 15) 귀농·귀촌을 실천하기 이전에 준비해야하는 주된 항목으로는 가족들의 합의, 예상소요경비에 따른 자금의 마련, 영농작목의 선별 및 영농기술 습득, 주택 및 농지 구입 등을 들 수 있다.
- 16) 2004년 예천군 예천읍 대십리로 U턴한 윤○○씨(52)는 건강상의 문제로 20여년 만에 귀농하였다. 학업 중인 세 자녀의 교육 문제로 단독으로 귀촌하여 비닐하우스를 임대하고 상추농사 전문기술자까지 초빙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3여년 동안 실패로 귀농준비금도 거의 바닥날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는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귀농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밤낮을 그리지 않고 상추 재배법과 연구에 매달린 결과 현재는 상추재배 전문가가 되어 귀농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윤○○씨의 경험에 의하면 철저한 귀농준비, 특히 가족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귀농교육과 정보 수집은 물론, 주말농장을 통한 체험을 거친 뒤 귀농을 결정할 것과 귀농한 후에는 도시의 편리함을 빨리 잊고 농업도 하나의 직업인만큼 전문가가 될 것을 제언한다.

- 17) 상주시의 이○○씨와 유○○씨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매스컴이나 지자체의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는 예비 귀농·귀촌인(가구)은 누구나 쉽게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이상의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부족한 1턴과 2턴의 이주자들의 경우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 18) 구체적으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15,000m²의 경지를 터전으로 영농기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전통 가옥과 친환경유기농업을 연계한 체험농장의 운영을 위한 정착준비를 하였다 한다.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서 전통 집짓기 방법과 집터를 잡기 위해 풍수 지리학을 공부하였고, 영농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농사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쓰고 있다고 한다. 과거 영농경험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영농은 시행착오중이라고 한다. 권씨는 U턴 귀농·귀촌인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준비 없는 귀농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귀농 전에 농사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뒤 귀농할 것을 강조하였다.
- 19) 그 외 직업에는 공무원, 회사원, 연구원, 교사, 도예가, 목수 등이 있다.
- 20) 현재 매스컴 및 지자체의 홍보자료에서는 ‘억대 귀농가구’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연매출이 ‘1억 원 이상’은 겨우 2%에 지나지 않았다.
- 21)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의 U턴 귀농인 이○○씨에 의하면 기술센터 등 전문 지도사의 이론교육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실제 자신의 포도재배기술은 포도농사에 능통한 이웃 농가를 통해 배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1년 동안 매일 해당 농가로 출퇴근 하면서 부모수로 농사일을 하면서 암묵적 지식 중심의 재배기술을 전수받아 이를 자신의 포도농사에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 22)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울진군 북면 사계 2리에서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노○○씨는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농 초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농사에 문외한이었으나 울진군 농업센터의 기술 및 교육지원으로 미나리 재배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울진군내의 신기술전문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23) 상주시 귀농인 이○○씨와 유○○씨에 의하면, 공공교육기관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총

4시간의 교육시간 중 2시간 정도는 시장, 시의원, 면장 등 각 관계자들과의 대면식이, 나머지 2시간은 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영농기술교육은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헌

-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은미·김경태·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11(1), 53-65.
- 김성학·서정원, 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1), 105-113.
- 김재홍, 1998,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연구, 25(1), 138-147.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경상북도.
- 박공주,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 2014, 한국의 귀농·귀촌 현황과 농촌의 변화, 한일농촌계획 전문가 공동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일, 1998, 成功的인 歸農을 위한 研究: 歸農事例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규선·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석태문·이현지, 2010, 농업, 과거와 현재, 대구경

- 북연구원.
 손상락, 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우성호, 2014, 귀농·귀촌의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종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34, 23-41.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열린충남, 54, 18-25.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25(3), 551-565.
 이철우·전지혜, 2015,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지역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49(1), 73-88.
 임혜령,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동석, 1998, 지역 귀농인들의 영농실태와 그 개선대책 연구 : 칠곡군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재·조은정, 2013,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 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9(4), 191-202.
 최윤지, 201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귀농 귀촌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 384, 43-54.
 한재형, 2013, 귀농귀촌 완전정복, 법률출판사, 서울.
 Fielding, G.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Harper and Row Publications, New York.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2014년 11월 6일, “전남지역 최근 5년 역귀농 비율은 평균 4.6%,”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86756>.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3월 19일, “2014년 귀농·귀촌, 44,586가구, 전년대비 1.4배 증가,”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6584§ion_id=b_sec_1&pageNo=1&year=2015&listcnt=10&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2&parent_code=3&popup_yn=N&tab_yn=N
 대구일보, 2015년 1월 5일, “상주 귀농가구 절반 수도권 출신,” <http://www.idaegu.com/?c=2&uid=308326>.
 영남일보, 2014년 7월 16일, “성공하는 귀농인,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1 - 귀농 일번지 경북도,”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716.010030719520001>.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http://kosis.kr>
 • 교신 : 이철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cwlee@knu.ac.kr, 전화 053-950-5234)
 Correspondence : Chulwoo Lee,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email: cwlee@knu.ac.kr, Tel: +82-53-950-5234)
 (접수: 2015.04.16, 수정: 2015.05.06, 채택: 2015.05.13)